

스크린쿼터에 관한 뉴스보도 담론분석

정미정*

(성균관대학교 강사)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참여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민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라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스크린쿼터, 영화산업, 뉴스담론

* tears@skku.edu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¹⁾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문화 확산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맺게 될 협상에서 문화적 예의를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약이 채택된 지 석 달 만에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협약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비준을 미루고 미국과의 FTA 협상만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논의가 진행되면서 영화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의 입장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게시판을 통한 네티즌들이나 일부 언론보도는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성장했음을 근거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서 당당하게 경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간 스크린쿼터가 보호해온 영화는 굳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음도 이야기한다. 이미 우리나라 영화도 몇 개의 영화만이 상영관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또 다른 입장으로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FTA 협상에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1)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애초 생명 다양성 또는 종 다양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파생하였다. 종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생태계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듯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다양한 문화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고 보존되어야 인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황동미 외, 2003).

영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은 정부와 영화계를 중심으로 대립하는 축소 혹은 유지의 단순한 구도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충돌을 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입장은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믿는다는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스크린쿼터가 보호해온 영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재한다. 또한 수많은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고 몇몇 스타들이 과도한 개런티를 받으면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싸움에 나선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도 단지 우리 영화계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정책이 필수임을 강조한다.²⁾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발표하던 1월말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사상최고인 70%를 넘겼다.³⁾ 그리고 지금, 불과 4개월 만에 한국 영화의 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다(《한겨레》, 2006.05.24). 물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계수치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근거로서 계속 제시되어왔고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다음의 <표 1>를 보면 세계 영화산업의 미국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
- 2)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들과 사회들의 특이성과 복수성 안에 구현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은 교류,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생명 다양성이 자연에게 필수적이듯 인류에게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긍정되어야 한다(강내희, 2003).
- 3)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의 경우 6월 6일 현재 전국 43.4%의 스크린이 73일을 채운 상태. 나머지 스크린도 상당수가 60여 일을 넘어서 이 할당량을 채우는 건 시간문제다. 영화계는 <왕의 남자>와 같은 영화 한 편이 나오면 이 73일이 쉽게 채워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국 영화의 극장에서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연합, 2006.06.15). 사실 이 수치는 2005년 12월 29일 개봉한 <왕의 남자>가 관객 수 1,230만 명(세계, 2006.06.20)이라는 흥행기록을 세운 데 기인한다.

<표 1> 미국과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비교 1999~2003년 평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국시장 점유율	상대국가시장 점유율
미국	약 85%	약 95%	약 40%(한국 내)
한국	약 2%	약 45%	0.1% 미만(미국 내)

출처: 《Film 2.0》, 2006.03.15에서 재구성.

2005년 12월에 발행된 문화관광부의 「영상정책자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영화수출액은 5,360만 달러이고 한국영화의 대미수출액은 230만 달러이다. 한국의 일방적인 적자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스크린쿼터를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은 이미 한국영화시장에서 충분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산업 대미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의 결과 보고서가 경향신문에 의해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FTA 체결시 영화·출판·방송 등 문화산업의 무역수지 악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가 결정된 영화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무시한 채 연내협상타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여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보고서는 ‘관세 인하나 철폐로 예상되는 단기적 이익은 대부분 제조업 국내생산 증가 및 무역수지 개선에서 비롯된 것일 뿐 FTA 체결로 모든 산업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경향신문》, 2006.03.24)”고 하였다. 이는 FTA 협상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FTA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정부가 그 폐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TA의 효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고 언론도 역시 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은 그 고유기능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 또한 가지고 있다. 스크린쿼터나

FTA협상에 대한 입장들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감수해야할 위험이 상당하다.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언론에게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주로 우리 영화의 시장점유율이나 영화배우와 감독들의 시위장면에만 집중되는 인상이다. 지금은 스크린쿼터 유지에 대한 찬성의 논리와 축소의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시기 진행되는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대한 논의들을 언론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이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첫째, 스크린쿼터에 대한 보도담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우리 언론의 시각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의 보도가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객관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3)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최근 1년(2005년 6월 1일~2006년 5월 31일)의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메인뉴스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대상으로 담론분석을 시행하였다.⁴⁾

미디어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서 문화, 정치 그리고 사회적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표현되는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기도 하는 중요한 제시자(presenter)이기도 하다. 미디어 담론은 이것이 사회를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그 자체로서 사회의 특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Bell, 1998: 64~65). 홀(Hall)은 미디어가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한다는 것은 선택과 제시, 구조화와 형태 결정의 능동적인 작업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즉, 그것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보다 능동적인 작업인 것이다. 그것은 의미의 실천이며 생산, 즉 따라서 ‘의미작용적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디어는 이러한 의미작용의 수행자이다(Hall, 임영호 편역, 1996).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미디어텍스트를 통하여 재현되는 의미작용적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담론을 생산하는 이 사회의 주도적 담론을 읽어낼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담론은 미디어 그 자체와 미디어와 관계된 다른 사회적 영역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담론의 질서’로 보인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커뮤니케이션 사건과 담론의 질서 모두에 초점을 둔다. 즉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사건을 설명함과 동시에 정치적 담론의 질서에 대한 구성과 형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은 첫째, 정치 담론의 질서에 의해서, 정치 담론을 구성하는 담론들과 장르들의 구조화된 형상을 밝힐 수 있으며,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정치적 담론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어떤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사건들을 사회적 실천의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천의 장 내에서 그리고 이러한 장들을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사회적 문화적 힘과 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사건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Fairclough; Bell: 1998). 담론의 사회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다이크(van Dijk)는 다음

-
- 4) Kinds를 통해 ‘스크린쿼터’로 검색하였으며 해당기사는 KBS 17건, MBC 34건, SBS 25건, 한겨레 147건, 조선일보 51건이었다. 사안의 종대성에 비해 세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기사 수가 매우 적었다.

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van Dijk; Bell, 1998, p.61).

- a) 담론의 맥락을 검토
- b) 포함된 집단, 권력관계와 갈등을 분석
- c) 우리와 그들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검토
- d) 전제되고 함축된 것을 자세히 서술
- e) 대립적인 집단 의견을 강조 혹은 경시하는 모든 형식적 구조 검토

반다이크의 틀을 적용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우리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 각각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보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안이다. 만약 축소되어야 한다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역시 구체적인 자료와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과의 FTA 본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많은 언론에서 주지하다시피, 이 협상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어떤 것이 확정되기 전에 올바른 정보, 보다 집중적이며 분석적인 정보에 근거한 최선의 판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그 판단은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2.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란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문화다양성의 차원에서 문화주권을 지키는 보호정책으로서 이 제도에 접근한다. 반면, 스크린쿼터의 축소 혹은 단계적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은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호정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반면에 그 논지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영화계 내부에서, 영화계 외부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유지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 입장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영화계 내부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화학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조희문과 독립영화감독인 최공재이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웹진 《뉴라이트》⁵⁾와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희문의 대표적인 주장은 한국영화가 경쟁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불신당하며 위축됐던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외국 영화수입자유화 조치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최근 한국영화의 성장 추세는 돌발적이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견디며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현상이다.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한다(《한국일보》, 2006.02.02)”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뉴라이트》 2월 12일 칼럼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외치는 영화인들을 “외제차 타는 아들이 농사짓는 아버지에게 생활비 달라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논지는 한국영화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의 보호정책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공재의 주장은 또 다르다. 독립영화감독으로서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스크린쿼터가 스스로 주장하듯이 자국문화를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스크린쿼터를 반대하는 것은 문화적 침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를 채워줄 산업적 침몰일 뿐이라는 지극히 혐오적인 결론(《뉴라이트》, 2006.02.14)”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9년 동안 그 어떤 영화계 내부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문화다양성을 근거로 하는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정작 한국 내의 다양성을

5) <뉴라이트>는 2005년 4월 창간되었으며 ‘자유주의, 세계화, 지식정보화’를 추구하고 일반기사는 보도하지 않으며 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 인터뷰, 네티즌들의 참여로 구성된다고 소개한다(<http://www.new-right.com>).

지키는 데는 소홀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화계를 비판하는 시각은 스크린쿼터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씨네 21》, 《Film 2.0》과 같은 영화잡지의 칼럼에서 나타났다.

영화평론가 문일평은 스크린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이라는 점에서 쿼터에 대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한 나라 안에서 형성된 독점 시장이 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면,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작은 영화를 보호해야 한다. 작은 영화를 보호할 만한 효율적인 방안은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으며,⁶⁾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만큼이나 절실한 목소리로 작은 영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다(《Film 2.0》, 2004.07.16)”고 주장한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스크린쿼터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다. 그는 외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스크린쿼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영화계가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내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에 무관심하고 무비판적이라는 부분을 비판한다.

내적 다양성에 대한 영화계 내부의 비판은 《인디포럼》 프로그래머인 김노경, 《Film 2.0》의 편집장인 김영진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Film 2.0》, 2004.07.09, 2004.08.24). 스크린쿼터가 그 유지의 명분으

6)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김기덕 감독의 <활>이다. <활>은 서울 강남 씨네스 G와 부산극장 등 단 두 곳에서 개봉했다. 전국 관객은 1,487명이었고 문을 내렸다. 개봉기간은 단 1주일이었다(Film 2.0, 2006.04.12). <활>은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받았다. <활>의 개봉 후 김기덕은 저예산 작가주의 영화의 열악한 관객층과 국내배급환경의 열악함으로 국내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개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다음 작품은 <시간>으로 6월 30일 개막하는 체코의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으며 30개국과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인터넷에서는 국내개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며 한 영화사에 의해 국내에 개봉하게 되었다(경향, 2006.06.14). 사실 영화의 가치는 흥행성적만 가지고는 평가될 수 없다. 물론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흥행성적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예술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부에서 추구하는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다른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 문화주권 수호와 문화 다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영화사 ‘마술 피리’ 대표인 오기인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민족과 문화 간의 다양성’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ilm 2.0》, 2004.08.03). 그는 영화계 내부에 산적한 문제를 인정하나 미국이 쿼터 축소를 한미투자협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문화다양성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지적을 포함하여 쿼터 이외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영화계 외부에서도, 특히 스크린쿼터에 대한 찬성입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준만도 국내적 다양성을 강조하였으며 영화인들의 여론투쟁이 실패하는 원인이 내적 다양성에 무심했던 그러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홍세화, 김소영 감독 등이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영화인들의 사회참여인식부족을 비판하였다(《씨네 21》, 2006.03.01).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미국이 축소요구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영화계의 항의시위와 삭발, 단식투쟁이 일어났고 이후 지금까지 축소와 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문제는 지금까지 9년 동안 논의가 스크린쿼터를 유지, 혹은 축소하는 부분에만 치우쳐 왔다는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영화계 내부의 문제는 산적하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하지는 입장에서라도 축소하지는 입장에서라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단순한 축소 혹은 폐지와 유지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영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이며, 다른 문화영역과도 차이점을 가진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영화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영화를 단순히 영화계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자신하여 보호정책을 없애거나 일부 독점적인 자본에게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축소를 주장하더라도 이들의 입장 그 이면에는 한국 영화가 자립해야하며, 그 건강함을 유지해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찬성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국가외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미국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시점이나 정부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시점에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스크린쿼터에 대한 연구

스크린쿼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강신일(2000)은 1996년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느슨한 실시⁷⁾가 이루어져 이를 기점으로 전후 한국영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994년에 실시된 영화별수 제한 철폐로 인한 스크린 수의 증가와 스크린쿼터제의 완화를 원인으로 한국영화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정일(2003)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면서 스크린쿼터의 강화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1985년 이후 강화된 146일의 의무 상영일수 시기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그 이전 121일일 때보다 오히려 낮으며 1993년에는 15.9%라는 최악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서 스크린쿼터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해영 외(2004)는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면서부터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그 효과를 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허위 상영일수가

7) 1984년 영화법 개정 및 1985년의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공연장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지역 안에 있는 공연장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6년 7월 한국 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조정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146일에서 106일로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줄고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했다고 보았다. 이 근거를 강신일의 연구에 적용해보면 한국영화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1996년이라는 시점이 스크린쿼터의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지켜지기 시작한 시점인 1993년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의 완화가 한국영화의 이익률을 증가시켰다는 주장과 대립된다. 또한 김미현(2003)도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부과함으로써 점유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영화의 성장에는 스크린쿼터라는 효과적인 자국 영화 보호장치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Lee and Bae(2004)는 20개국의 영화자료를 가지고 스크린쿼터제가 자국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스크린쿼터가 자국영화의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이해영 외(2004)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그는 스크린쿼터를 하루 축소할 경우 영화 시장의 규모가 약 327억 9,600만 원이 감소하고 10일 축소시 약 3,084억 3,200만 원, 20일 축소시 5,736억 6,800만 원, 30일 축소시 약 7,955억 5,800만 원, 40일 축소시 9,741억 5,300만 원, 그리고 50일 축소시 1조 1,094억 5,2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스크린쿼터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고 있었다.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에 관한 연구로는 오정일·조현승(2004)의 논문이 있다. 그는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목표를 영화의 다양성 확보로 가정하고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국내영화산업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는데 스크린쿼터제가 유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993~1998년에 국산영화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스크린쿼터제가 국내영화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스크린쿼터제가 유효하게 작동했던 시기에 한국영화의 불평등성이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소수의 흥행성이 높은 작품만이 혜택을 입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논의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의심케 한다. 스크린쿼터는 외국의 영화와 자국영화 사이의 쿼터제이지 국내 영화의 상영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도 하지 못한다. 스크린쿼터가 보장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내적 다양성이 아닌 외적 다양성이며 내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 내적 다양성의 문제는 스크린쿼터 외에 다른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희·이태규(2006)는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는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이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산업에서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스크린쿼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영화 시장 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허부구조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내적 다양성은 스크린쿼터가 담보해야 할 영역이 아니며, 그 책임 역시 스크린쿼터에 물을 수 없다.

이 외에도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한국영화산업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이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은 몇몇 영화를 제외하고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앞서의 연구결과에서처럼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률은 2001년 29.3%, 2002년 -9.7%, 2003년 -8.8%(김미현·최영준 외, 2005)로 하락했다. 2004년 플러스대로 올라왔으나(박영은·이은태, 2005) 여기서 특이치 2편을 제외할 경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반면 극장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미현·최영준 외(2005)는 투자·제작 부문과 극장 간의 수익분배 비율인 부율⁸⁾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경우 투자·제작과

8) 부율은 영화 관람료를 투자·제작·배급사와 극장이 각각 나눠 갖는 비율이다. 현행 부율을 보면 한국 영화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영화 관람료 가운데 50%씩을 투자·제작·배급사와 극장이 각각 가져가고,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60%를 배급사가, 나

극장 간의 부율은 5:5인데 반해 할리우드 영화는 6:4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 비하여 스크린 당 좌석 점유율이 평균 7~10%가 높기 때문에 극장주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분배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율을 6:4로 변경할 경우 수익률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스크린쿼터에 대한 연구는 영화가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특징만을 가지고 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의는 스크린쿼터가 적용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것을 환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화가 갖는 문화상품이라는 특성이나 영화가 우리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스크린쿼터의 존재가치가 문화적 가치의 보존에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라는 보호정책이 외국의 영화에 대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제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머지 40%를 극장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할리우드에서는 처음에는 제작자가 80%, 극장이 20%를 가져가고, 상영기간이 길어질수록 극장 몫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영화계는 제작사에 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한국 영화부율을 최소한 외국 영화 부율인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극장들은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보장하고 있는 한국 영화와 그렇지 못한 외국영화의 부율을 똑같이 맞추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한겨레》, 2005.06.14).

- 9) 1월 27일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화부장관은 “한국영화도 외화와 마찬가지로 6대 4의 부율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월 9일 서울시 극장협회는 국내 각 영화제작, 배급사에 외화의 수익배분구조도 5대5로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음이 드러났다. 한국영화와 같은 비율을 외화에 적용하자는 주장이었다(《Film 2.0》, 2006.02.21). 극장협회의 이러한 모습은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했을 당시 자율적인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결의, 발표했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크린쿼터만으로 모든 영화산업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영화산업 내의 문제를 스크린쿼터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영화정책 중 일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는 스크린쿼터만으로 영화산업 전체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기준으로 스크린쿼터제도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많았다. 영화산업에 산적한 문제를 인정한다면 보다 다양한 축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

1) 스크린쿼터: FTA협상의 장애물

분석결과 언론이 스크린쿼터를 규정하는 기호는 천편일률적이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스크린쿼터는 FTA협상과 연계되어 서술되고 있었으며 스크린쿼터문제는 FTA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과제로 표현되었다. 해당기사들은 주로 올해 1월의 스크린쿼터 축소발표 시점에 작성된 기사들이었다.

“한미자유무역협성 체결을 위해서는 선결과제(MBC, 2006.01.20)”, “한미간 협상 개시의 장애물로 남아온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KBS, 2006.01.19)”, “스크린쿼터 문제 뜨거운 감자(SBS, 2006.01.21)”에서 보이듯이 ‘선결과제’, ‘장애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스크린쿼터문제를 미국과 정부의 입장대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기사 수가 적었던 방송뉴스에 비해 신문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훨씬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겨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¹⁰⁾

10) 스크린쿼터에 대한 보도에서 한겨레는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내린 정부에 비판적이고, 영화산업 내의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스크린쿼터 문제의 규정만은 다른 언론과 시각을 같이 하고

“스크린쿼터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한겨레》, 2006.01.20)”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스크린쿼터’(《한겨레》, 2006.01.21)”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쿼터 문제(《한겨레》, 2006.01.27)”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곧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다(《한겨레》, 2006.01.28).”

“특히 미국이 FTA 협상 개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축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조선일보》, 2006.01.07).”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두 나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146일 이상에서 연간 73일 이상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조선일보》, 2006.01.28).”

기사에서 보이듯이 ‘장애물’, ‘뜨거운 감자’, ‘걸림돌’이라는 부정적인 기호로 스크린쿼터를 규정하는 것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FTA 협상의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논리와도 연결되어 스크린쿼터의 축소 발표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협상체결 만료기한이 내년 6월이고, 의회가 통상 석 달 간의 사전검토를 거치는 까닭에 양국 정부는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다(한겨레, 2006.01.21).”

“정부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부가 영화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촉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일정을 고려해 더는 늦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협상권이 내년 7월 1일에 끝나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정부 간 협상을

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시기에는 FTA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보다는 긍정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었다.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한겨레》, 2006.01.27).”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선결과제로 미국 쪽이 줄기 차게 요구해 온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두 나라 자유무역 협정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06.01.27).”

“한-미 FTA 협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협상 시한이 내년 6월 말까지지만 미국 행정부의 의회보고 기간을 빼면 11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협상 기간 앞뒤에 걸려있는 지방선거와 대선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조선일보》, 2006.01.28).”

FTA 협상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함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한겨레신문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FTA 협상 일정이 촉박한 것과 더불어,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오는 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관세 철폐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가고, 소비자 처지에서선 미국산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게 되며, 덩달아 물가도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수출 증대 등으로 일자리도 늘어난다(《한겨레》, 2006.01.27).”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약 12~17% 늘어나고 우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겨레》, 2006.01.28).”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FTA로 인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의 기술수준도 향상되기 마련… 한미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경제제도도 보다 선진화된다(《조선일보》, 2006.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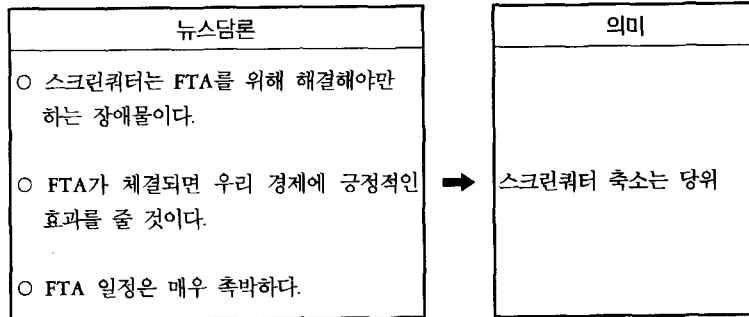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미국과 FTA 협상을 맺거나 진행 중인 중동·중남미 시장으로 나아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6.01.28).”

이는 모두 스크린쿼터의 축소발표 시점의 기사들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상의 뉴스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보도 담론의 의미



모든 언론이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FTA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FTA 일정의 촉박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의 발표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FTA를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이 당위임을 강조한다.

2) 스크린쿼터: 그들만의 문제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보도는 이 문제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화계’의 반발이라는 표현으로 스크린쿼터의 문제가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었다. 영화산업의 문제는 영화인들에 국한된 문제일수만은 없다. 영화라는 것이 ‘상품’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영화는 다른 상품과는 분명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화가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화적 산물임을 인식한다면 이 논의는 사회 전반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영화계는 강력 반발(SBS, 2006.01.20)”, “영화계 강력 반발(SBS, 2006.01.26)”, “스크린쿼터 끝내 축소… 영화계 반발(SBS, 2006.03.07)”, “영화계, ‘스크린 쿼터 축소’ 강력 반발(KBS, 2006.01.26)” “영화계는 정부가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받아들인 것은 문화 주권의 몰락이라고 주장(KBS, 2006.01.26)”,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KBS, 2006.02.08)”, “변수는 영화계의 반발(MBC, 2006.01.07)”, “우리 정부는 가능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화계의 반발이 변수(MBC, 2006.01.20)”, “스크린쿼터에서 보듯 관련분야의 저항이 불을 보듯 한데다(MBC, 2006.02.02)”, “영화업계는 스크린쿼터 축소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조선일보》, 2006.01.20)”, “국내 영화업계 반발을 수습하는 것도 급선무(《조선일보》, 2006.01.27)”

위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스크린쿼터의 문제를 영화계의 문제로 축소하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기사의 수가 적은 방송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화인들의 1인시위에 대한 스케치 보도도 여러 건 보도되었다.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뉴스보도가 스크린쿼터의 축소방침에 대한 논의보다는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단순보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영화가 우리에게 갖는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어 우리 문화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영화계의 문제로 축소해서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즉,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 ‘영화계’만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 방송사의 보도가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단순한 내용에 그치는 것에 비해 조선과 한겨레는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겨레와 조선은 그 입장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한겨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스크린쿼터 축소, 자존심도 신뢰도 버렸다(《한겨레》, 2006.01.27)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제작자의 심리적 위축—투자위축—영화제작 축소—점유율 축소로 이어지기가 쉽다. 학계와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10일 축소

에 1,000억 원씩 매출이 줄 것으로 분석했다. 멕시코는 1994년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없앤 뒤 3~4년 만에 자국 영화가 연 100편에서 10여 편으로 줄었다.”라고 하여 스크린쿼터 축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 지켜야 할 까닭(《한겨레》, 2006.01.28)에서 “세계배급망은 할리우드의 몇몇 배급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 영화시장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쩌다 된 요행이 아니다. 이들은 엄청난 물량과 자본으로 한국 영화시장을, 자신들이 곧 법이었던 1990년대 초중반으로 회귀시킬 것이다. 미국 영화업계의 횡포가 재연될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익? 미국 위하는 게 애국인가(《한겨레》, 2006.02.03)” 등의 기사에서 축소발표 당시 정부의 비민주적인 태도와 스크린쿼터 축소가 가져오게 될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한겨레는 스크린쿼터 축소할 경우의 손실액을 자세하게 제시(《한겨레》, 2006.01.27)¹¹⁾하여 그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일보는 그 비판지점이 다양했다. 스크린쿼터 축소 자체에 대한 논평보다는 “쿼터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까지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완전무결하다고 우기려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나서서 사태를 풀어야 할 쪽은 정부와 미국 쪽이다(《조선일보》, 2006.03.09)”라며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영화인의 자신감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영화산업의 성패는 제작이 아니라 배급에 달려있다거나 예술영화관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영화계 반박은 무시하고, 이성적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을 ‘자신감’ 차원으로 바꿔 버린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영화의 자신감을 위해 구체적으로

11) 2004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가 국내 통상 전문가들과 공동 기획해 발표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 투자협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하루 축소할 경우 영화시장 규모는 약 160억 원 감소하며 50일을 축소하는 경우 그 손실액은 5,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조6천억 원에 이르는 한국 영화산업 규모액(2003년 영진위 발표)의 5분의 1에 해당한다(한겨레, 2006.01.27).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조선일보》, 2006.03.25)”라며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접근법을 비판하였다. 비판의 논점이 절차상의 문제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부분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 비판에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달리 조선일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사가 있다.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 영화계에 혼자 No하는 ‘뚝심’(《조선일보》, 2006.02.20)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보신(保身)주의가 만연돼 있는 관료 사회에서 왜 그는 유별나게 영화계 공격에 나서고 있을까. 더구나 우리나라 영화업계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공신들이 포진해 있고 삭발 투쟁 등 싸움경력도 화려하다. 권 차관은 2003년 초부터 이런 강한 상대를 맞아 ‘나홀로 투쟁’을 해왔다.” 이 기사에서는 영화계와 대립하는 권태신 차관에 대해 ‘뚝심’, ‘보신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관료사회에서 유별나게’라고 하며 극찬을 하고 있다.

현행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영화계에 대해서도 “대학 때조차 머리 띠 한번 돌려보지 않았을 영화인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까지 나섰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인기 스타들의 1인 시위를 보면서, “아니, 외제차에 명품만 찾던 사람들이 무슨 문화 주권 수호야?”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판인데(《조선일보》, 2006.02.17)”라고 그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¹²⁾

조선일보의 이번사안에 대한 비판기사들은 현행 스크린쿼터를 유지하지는 입장에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12) 해당 기사를 포함하여 조선닷컴에 실린 몇 가지의 기사는 결국 영화감독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로 하여금 경고문을 발표하게 하였다. 문제가 된 기사는 2월 14일 조선닷컴의 “암사자의 심정으로 스크린쿼터 절벽 밑으로 버려야”, 2월 16일 조선닷컴의 “스크린쿼터 없었으면 <올드보이>도 없었다고?”, 2월 17일 《조선일보》의 김구라 칼럼 “투쟁은 인기순이 아니잖아요”, 2월 18일 《조선일보》의 공지영 인터뷰, 2월 20일 《조선일보》의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 혼자 No하는 뚝심” 등이다. 이 기사들에 대해 영화계는 ‘악질적인 보도행태’라고 비판하며 조선일보 직원의 영화제작사 출입, 취재, 인터뷰를 금지하고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영화제에 출품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영화인들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나 영화계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평가하는 재경부 차관에 대한 ‘극찬’을 보면 조선일보가 스크린쿼터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시각은 이후 다른 여러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이 스크린쿼터의 문제를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기사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언술의 주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사가 적고 방송이라는 특성상 인터뷰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방송기사에서 특히 나타났다. 대립구도는 정부, 경제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 축과 주로 배우들과 감독의 한 축으로 구성된다. 대립되는 논리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주장을 넘어서 FTA에서 얻게 될 이득을 강조하여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 2> 뉴스보도담론의 언술주체와 주장의 대립구도

주체	주장		주체	주장
권태신/재경부 차관 김현중/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시형/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김형주/LG경제연구원 박사 김창호/국정홍보처장 황경주/LG전자 미주법인 상무 정문수/경제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스크린쿼터 축소 FTA협상은 우리에게 유리	↔	안성기/배우 문근영/배우 최민식/배우 장동건/배우 이준기/배우 김민웅/교수 심광현/교수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주권침해 FTA반대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언술주체의 대립은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대변자와 배우로 대표되는 영화계의 주장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주체의 대립에

서 언론이 이 문제를 정부입장에 근거하여 보도하면서 동시에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배우라는 대립구도는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의 논리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논리에 비해 배우들의 감정적 구호성 발언은 그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각 주체별 주장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 FTA협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대립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언론과 달리 한겨레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프랑스의 니오그레 감독, 로버트 필론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 대표, 미국 경제학자들의 서한, 교육단체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또한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겨레는 사실과 칼럼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를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FTA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3) 스크린쿼터: 영화에 대한 특혜

다음으로 나타난 뉴스담론의 특징은 스크린쿼터를 영화에 대한 특혜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문화계의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2월 13일의 가수 신중현에 대한 인터뷰였다. 이 인터뷰는 중앙일보 2월 13일 1면기사에서 다른 몇몇 예술계 인사들의 말과 함께 실렸으며 같은 날 YTN과 SBS도 해당 내용을 보도하였다.

“스크린쿼터가 뭐기에?...문화계 공방 확산(SBS, 2006.02.13)”라는 표제의 기사에는 “스크린쿼터 시수가 지나치다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나선 곳은 음악계와 공연계입니다. [신중현/가수. 대중음악계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크린쿼터에 의존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도윤/설엔컴퍼니 대표(뮤지컬 제작자): 과거에 무방비 상태에서 육성제도 없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하며 보호막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체경쟁력을 키우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영화계 이외의 다른 문화영역에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특혜’가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¹³⁾

이러한 기사는 스크린쿼터라는 제도가 유독 영화계에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다른 문화영역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일한 특혜이니 축소되어도 좋다는 논지를 내비친다. 이에 더하여 SBS는 해당 기사에 “김형주/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해당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력 강화나 노력을 멀리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추가하고 있다. 보호책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사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가수 신중현의 인터뷰 외에도 다른 문화영역에 대한 기사는 스크린쿼터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KBS는 “‘문화 편식’ 심각(KBS, 2006.03.08)”에서 영화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현재 “영화나 뮤지컬 등 일부 장르만 대중화 되고 있는 문화 편식 문제”가 심각한데 “국악이나 무용계는 변변한 전용극장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경쟁력 있는 레퍼토리 개발과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스타 발굴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순수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공연예술

13) 이후 <프레시안>(2006.02.14)에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해당기사에 대한 논평이 실렸다. 천 의원은 “현재 방송위원회의 ‘방송비율 등의 편성 프로그램 고시’에 따르면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국내 제작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영화계와 비교해 음악계의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스크린쿼터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오히려 영화진흥의 모범사례를 음악진흥으로 확산시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2006년 2월 13일 기사 1면 머리에 위치한 “대중음악은 보호 없이도 버텼다” 아래에 “한미 FTA 꼭 가야할 길입니다”라는 광고가 함께 실려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일보에서 1면은 광고주를 위해 기사를 싣는 서비스 공간인가?”라고 질문했다.

쿼터제'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고려해 볼 때"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연극협회 이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를 키웠듯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영화 이외의 영역에도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지원책이 영화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른 문화영역들과의 공존공생을 위한 동반성장을 바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논조는 문화계 내부의 논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더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소설가 김탁환의 인터뷰(2005.07.02)를 통해 "소설시장에는 스크린쿼터 제도가 없어요 내가 싸워야 할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 조앤 롤링이죠"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005년 8월 4일 칼럼을 통해 "한국형 팩션 『열녀문의 비밀』을 쓴 김탁환은 "소설에는 '스크린쿼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과 벌거벗고 경쟁해야 한다"고 했지만, 역으로 그것이야말로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김탁환의 "소설에는 스크린쿼터가 없다"는 인터뷰는 해당 기사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에 대한 책들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갑자기 느닷없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소설가의 인터뷰기사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다시 그의 말을 빌어 소설에는 스크린쿼터가 없음을 강조한 것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는 후에도 계속되었다. "공지영 - 스크린쿼터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문학시장에서 한동안 외국소설에 눌렸던 한국소설의 자존심을 홀로 지키고 있는 '잔 다르크'대(《조선일보》, 2006.02.18)." 스크린쿼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스크린쿼터도 없는' 것을 강조하며 이 정책이 영화계에 국한되어 있는 특혜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에만 보호정책이 시행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한국 영화는 스크린쿼터제 등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질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나는 한국 연극 역시 선진국 못지않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연극 관객은 영화와 달리 폭발적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눌러앉아 관객을 바라봐야 하는 특성상 연극의 영세성은 필연적이다(《조선일보》, 2005. 11.28)”의 기사를 보면 영화는 스크린쿼터라는 제도로 인하여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연극은 그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없어서 발전이 어렵다는 논지이다.

다른 문화영역의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스크린쿼터를 이야기 하는 것은 오직 영화계만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지원책이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을 통해 영화계와 다른 영역들을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스크린쿼터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시장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영화계뿐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루어야 하며 다른 문화영역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별개의 문제를 인터뷰어의 표현이나 평가를 통해 스크린쿼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계 내부의 대립을 양산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한겨레만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른 문화영역의 인사들이 스크린쿼터를 비판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각 문화 분야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는 매우 위험한 단순비교”라고 대중음악계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한겨레》, 2006.02.14).

4)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경쟁에 나서라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논쟁은 1998년 IMF관리체제에서 미국이 외자유

치를 조건으로 축소를 요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찬성담론이 힘을 얻고 있었고 아직은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개방하기에는 모자라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고 2006년 스크린쿼터는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는 예전과는 다르다. 2006년 2월 실시된 스크린쿼터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스크린쿼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64%,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가 75.6%로 압도적이었지만 한국 영화경쟁력이 있다가 91%, 영화산업을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한다가 57.6%로 나타났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를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하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SBS가 2006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결정된 정부의 축소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 73.9%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우리 영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당시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급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근거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영화의 성장과 경쟁력이며 이는 수용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은 각종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영화의 경쟁력은 주로 방송사의 뉴스보도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크게 웃돌 만큼 성장했다는 게 스크린쿼터 축소의 근거… 한국 영화의 전체관객수와 전체 매출액은 2000년 이후 3배가량 신장(SBS, 2006.01.26).”

“영화계도 이번을 계기로 한국영화의 자생력을 한 단계 더 키워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SBS, 2006.01.27).”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겠다는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 사이에는 냉담한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잘 만들어진 우리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변함없이 뜨겁습니다(SBS, 2006.01.29).”

“오늘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우려하면서도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스크린쿼터

가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소식에 영화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이번 설 연휴에도 한국영화의 흥행 돌풍은 이어질 것으로(MBC, 2006.01.27)”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결정과 영화인들의 반대시위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왕의 남자는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MBC, 2006.02.10).”

“<왕의 남자>처럼 작지만 강한 영화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 국내 흥행에만 매달리기보다 세계 시장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목소리(MBC, 2006.05.26)”

기사들은 모두 우리 영화가 성장하여 경쟁력이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축소의 근거를 정당화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한겨레만이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 영화산업의 문제점을 짚고 있었다. 한겨레는 한국영화의 부울(《한겨레》, 2005.06.14, 2006.03.09)이 외국영화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하며, 스태프들의 처우(《한겨레》, 2006.02.07, 2006.04.04)가 개선되어야 하고 국내적 다양성과 상생추구(《한겨레》, 2006.02.09, 2006.02.16, 2006.02.23)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지적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는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논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겨레가 영화산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의를 영화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시켜야만 궁극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 언론

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언론이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비해 한겨레는 정부의 입장과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규정하는 방식은 다른 언론과 다를 바 없이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한겨레가 스크린쿼터에 대해 보도를 하는데 있어 온전하게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영화산업에 대한 우리 언론의 인식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며 FTA의 이득과 일정의 촉박함을 강조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이는 기사에서 드러나는 언론주체의 대립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배우를 대비시켜 그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언론주체의 대립구도는 언론이 정부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화가 단순한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특수한 문화상품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채,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켜 사회전반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을 회피하고 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영화 이외의 다른 문화영역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영역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영화계에만 보호정책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스크린쿼터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계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들에게는 마치 영화계만이 특혜를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입장이 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며 중요한 경제협상과 연관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한편의 입장을 손들어주는 것은 언론이 지양해야 할 바이다. 우리

언론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공정한 보도에 있다면 비록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대립되는 각 주장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사회 전반에 객관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한겨레를 제외하면 침묵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히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분석대상인 언론이 보도하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문제는 한결같이 FTA와 연관 지어 해석되고 있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FTA 논의의 틀에 한정되어 보도되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 영화산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보고된다. FTA의 문제속에서만 스크린쿼터를 바라보지 말아야 하듯이 스크린쿼터의 축소, 유지 논란 속에서만 영화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스크린쿼터는 영화정책 중의 하나이며 영화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스크린쿼터를 넘어 영화정책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내희 (2003). 문화다양성, 세계화 그리고 교역. 『유네스코 세미나: 문화다양성 국제규약 제정의 가능성과 전망』.
- 강신일 (2000).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제9권 2호, 137~156.
- 김미현 외 (2003).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현안연구』 2003-1. 영화진흥위원회.
- 김미현·최영준 외 (2005).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과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5-2,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관광부 (2005.12). 『영상정책자료』.
- 박영은·이은태 (2005). 2004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과 영화산업 수익성 향상방안. 『연구보고』 2005-7, 영화진흥위원회.
- 오정일 (2003). 스크린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168호 산업연구원.
- 오정일, 조현승 (2004). 스크린쿼터제는 국산영화의 다양성확보에 기여했는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24호 산업연구원.
- 이혜영 외 (2004).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 『연구보고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임영호 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 최승희·이태규 (2006).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 황동미 외 (2003). 『국제문화다양성 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Allan Bell and Peter Garrett (1998). *Appro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 Lee, Byoungkwan and Hyuhn-Suhck Bae (2004). The Effect of Screen Quotas on the Self-Sufficiency Ratio in Recent Domestic Film Markets. *Journal of Media Economics Vol.17*, 163~176.
- 7월 1일 스크린쿼터 축소 - 2. 영화계에 미칠 파장 (2006.06.15). 『연합뉴스』.
- ‘왕의 남자’, 대중상 15부문 노미네이트 (2006.06.20). 『세계일보』.

- 극장 부울 문제, 폭풍전야 - 외화 부울도 5대 5로 적용? (2006.02.21). 『Film 2.0』.
- 김기덕 '시간' 국내서 볼 수 있다 (2006.06.14). 『경향신문』.
- 대중음악도 방송쿼터의 보호를 받는다(2006.02.14). 『프레시안』.
- 몰이해에 기반한 냉소는 무의미하다 (2004.08.03). 『Film 2.0』.
- 스크린쿼터 논란에 부쳐 - 김영진의 러프컷 (2004.07.09). 『Film 2.0』.
-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 이제 그만 좀 하지? (2006.02.14). 『뉴라이트』.
-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 가지 시선 (2006.03.01). 『씨네 21』.
- 야만스러운 독점에 관하여. 한국시장의 땅따먹기와 약육강식의 세계 (2004.07.16). 『Film 2.0』.
- 영화와 자동차, 그리고 스크린쿼터. 지금, 스크린쿼터의 이슈 (2006.03.15). 『Film 2.0』.
- 최민식 씨에게 묻습니다 (2006.02.12). 『뉴라이트』.
- 한-미 FTA 문화산업 영향 보고서 내용/영화 절반만 개방해도 '타격' (2006.03.24). 『경향신문』.
- 한국산 작은 영화는 전투 중 - 한국영화 1만 명 시장의 현재 (2006.04.12). 『Film 2.0』.
- 한국영화 '어른론' 허상 개봉박두 (2006.05.24). 『한겨레』.
- 한국영화 자립할 수 있다 (2006.02.02). 『한국일보』.
- 합정에 빠진 '문화다양성'을 직시하라 (2004.08.24). 『Film 2.0』.

(최초 투고 2006.5.29, 최종 원고 제출 2006.7.24)

A Study of the News Coverage of Screen Quota

Mi-Joung Joung

Lecturer

Division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ing, Sungkyunkwan University

Screen Quota is very important topic at our whole society not only film industry. Moreover the opinions are sharply divided. So, journalism, at the objective and neutral posi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present objective field to discuss and neutral information. This script censoriously focuses that how Korean Journalism handles Screen Quota issue from the upper mentioned premises. The first point is Korean Journalism gives legitimacy to the Governmental persistence, which is fixing Screen Quota as a hurdle for the FTA settlement so that it should be reduced. Secondly, Korean Journalism has been reducing the importance of the Screen Quota issue as the problem of film industry itself own, describing it as combat between Government and Film Industry. Third, it describes the Screen Quota as a privilege granted to the Film industry only. Finally, it provides power to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which insists to reduce the Screen Quota mentioning the superiority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an Films discriminatingly. In conclusion, I could not but define that Korean Journalism is only speaking for America and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about the Screen Quota issue which is divided sharply. What it means is Korean Journalism has not been providing not only objective information but also impartial dispute field to the public for the issue which has very importance socially. The news and discussions about Screen Quota shows that this issue is not free from the progress of FTA which includes the Screen Quota problem. Further on, it could be deduced that the discussion about Korean film industry has kept on focusing its topic to the choice of decreasing or maintaining Screen Quota. The cultural contents have been expanding its importance day by day. Endeavors to settle the enormous problems of film industry should be preced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to prepare against market opening. Consequently, to solve the problems of film industry, Screen Quota should

be positioned as a protect policy rather than a remedy for every ill, at the same time all the possibilities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for the problems that Screen Quota could not solve.

Key words: Screen Quota, News Coverage, film industry